

종합·해설

해남군 여직원 복지급여 어떻게 빼먹었나

차명계좌 이용·유령 수급 5년간 10억여원 야금야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민의 혈세를 곳곳 빼먹듯이 빼들려 호화생활을 즐기는 동안 지방자치단체 감사에서는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허술한 보조금 지급 시스템 때문이다. 전남지역 각종 사회복지 예산만 연간 1조4천억원.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지급 업무와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곳곳에서 줄줄이 새고 있어 보조금 지원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너명이 수천명 관리...감독 불가능 엄격한 심사·검증 시스템 구축 시급

◇횡령 수법=감사원에 적발된 해남읍사무소 장모씨는 지난 2001년부터 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맡아왔다. 8년 동안 한 업무만을 담당해온 베테랑(?) 공무원인 셈이다. 장씨는 이같은 점을 이용해 지난 2002년6월부터 2007년9월까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쓰여야 할 돈을 야금야금 빼내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해남읍 박모(69)씨 등 780여명의 주거급여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해 해남군청 사회복지과로 송부하고, 해남군이 이를 세입·세출 계좌로 입금하면 미리 개설해 둔 자신의 아들 등 총 34개의 차명계좌로 분산해 빼돌렸다. 차명계좌는 장씨의 남편과 아들 등 친인척 9명과 지인과 기초생활수급자 25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 등을 부풀려 신청해 수급자에게 지급한 뒤 남은 금액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밖에 수급 대상자가 해남군을 떠나게 될 경우에는 가짜 이름을 기재해 복지급여를 타냈다.

◇저소득층 돈 빼들려 호화생활=저소득층에게 돈을 가져야 할 돈을 빼들린 장씨는 이 돈을 이용해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장씨는 감사원과 경찰조사에서 횡령액 가운데 5억원을 모친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억원은 토지취득·채무변제·자동차 구입·해외 여행비 등 개

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횡령 이전 4천794㎡였던 그의 가족 명의의 전답은 횡령 후 1만㎡가 더 늘어났으며, 148.761㎡의 고급 아파트도 구입했다. 또 2008년식 3천300만원 상당 QM5 승용차, 1천500만원짜리 SM3 승용차, 2008년식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1천300만원)도 구입했다.

◇복지 급여 지급 어떻게 되나? =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예산은 5조에 160여개 항목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1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기초생활보장급여, 노령연금, 장애인 보조금 등 3개 항목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 금액은 7천억원 정도로 절반 가량이이다.

이들 각종 보조금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수혜대상자를 파악해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은 이를 확인하고 광역 지자체를 통해 정부 복지행정시스템인 '세울시스템'에 수혜대상자의 이름과 계좌 등을 등록, 매일 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급응기관을 통해 수혜대상자의 계좌에 입금된다.

◇보조금 지급 관리 '허점'=도내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람만 12만1천명에 달하고, 노령연금 대상자는 무려 31만3천명에 달해 지자체 몇몇 공무원이 이를 모두 확인하고 관리·감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수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해당 주민이 실제로 보조금을 받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인지도 담당 공무원의 보고만으로 판단할 뿐 이를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상급기관에 보고하더라도 수혜대상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기 어렵고, 또 등목계좌가 수혜대상자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장씨는 해남군에만도 급여수급자가 수 천명이나 돼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해남읍에는 4명의 복지사가 37개 마을 기초생활수급자 1천151명에 대한 지원금 24억5천여만원, 장애인 313명에 대한 보조금 2억7천여만원,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2천272명에 대한 지원금 21억5천여만원을 관리하고 있다. 군은 장씨가 수혜대상자로 신청한 이름과 계좌가 실제로 급여대상자임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개선 방향=수혜대상자의 엄격한 심사, 투명한 보조금 지급 경로와 사후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이번 횡령사건과 관련해 '사회복지전달시스템'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비리가 자체 감사기구의 부실한 운영에도 상당 부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한 가칭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dia@



亞문화전당 공사 재개 옛 전남도청 별관철거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중단됐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3개월 만인 10일 재개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이날 옛 전남도의회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이달 중순께 별관철거를 단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5·18유족회와 5·18 부상자회가 '별관 원형 보존' 투쟁을 벌이고 있어 공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미 FTA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이나

美무역대표부 대표 내정자 반대 발언 파장

미국 통상정책을 책임질 톤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미측이 향후 취할 '액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은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가 전 달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미측의 '액션'이 '재협상'이 될지, 아니면 '추가협상' 또는 '추가협정'이 될지는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식적인 용어의 정의가 확립돼있지는 않지만 일단 '재협상'(renegotiation)은 양측간에 이미 타결된 협정문을 수정하는 방식을, 추가협상은 자동차나 노동, 환경 등 일부에 대해 부속서만 덧붙이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방식 뿐 아니라 재협상은 협정문을 뜯어고쳐야 하는 만큼 국회의 추가

인준이 필요해 부담이 크지만 추가협상은 인준이 불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과거 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해 FTA를 타결한 뒤 재협상을 벌인 사례는 없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뒤 추가 부속서를 넣는 형태로 추가협상을 벌인 전례만이 있을 뿐이다.

추가협정은 추가협상보다 기본적으로는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부담은 덜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 '신발전 투자촉진 특별법' 입법예고

광주 외연 확대·전남 낙후 탈출 '원인'

광역시 인근의 낙후지역을 광역시와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신발전지역 육성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남도의 낙후지역과 광주시의 5개구를 지역별로 묶어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다.

그러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전남에서는 이미 한 곳이 종합발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로 종합발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2개 시·군 가운데 상당수가 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남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시 자치구와 연계한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역시 종합발전지역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그동안 사업부진자 사업비가 부족해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광주시의 외연이



수십년 동안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돼온 화순군 등 광주시 인접 시·군이 '신발전지역 육성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화순군-뉴타운설명회' (광주일보 자료사진)

확대되는 효과를 거둬들여 도시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인접 지역인 화순, 함평 지역이 개발될 경우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광주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과 맞물려 이들 지역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광주시와, 인접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한다.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지형을 형성해 온 지자체들이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펼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전남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 목포시와 무안·신안·영암·해남·진도군 일대 1천216㎡가 서남권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남도 내에 또 다른 종합발전구역이 들어설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김영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사장

"나에게 삶은 이는 누구와도 외는할 수 없는
고독한 노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내 마음속 득중 같은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민선명

민족과 종교를 초월해 긴밀한 세계평화를 위해 살아온 분산명 총대의 인품적이고 감동적인 일대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세계를 무대로 사랑과 평화를 나누어온 50년간 분산명 총대의 100 일대기
인생을 마무리한 삶은 마지막 시간에도 살아있고 그가 평화를 일깨워준
민족의 눈물과 희한, 꿈과 비전, 열정과 헌신에
일여 명이 그의 삶에 대해 고백하고도, 다시 한번 사랑과 평화의 길을
전망하며 그의 삶에 대해 고백하고도, 다시 한번 사랑과 평화의 길을
전망하며 그의 삶에 대해 고백하고도, 다시 한번 사랑과 평화의 길을